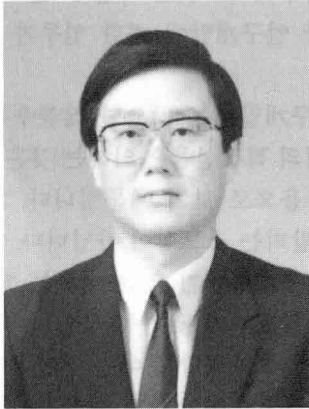


방위산업 국제협력 정책 방향



韓南星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 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현행 국내연구개발능력 및 생산업체의 능력만으로는 무기체계획득에 필요한 자주적인 기술개발이 곤란하므로, 해외무기획득을 활용한 기술획득과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구매를 통한 기술획득이 필요하며, 제한된 국내소요를 고려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위산업 국제협력 정책방향의 기본목표를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의 역량을 강화할수 있는 선진기술 획득에 두고, 이를 위해서 고도정밀 군사기술 획득과 군사·민수 공용기술획득, 부품수출의 확대 및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축적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방위산업 국제협력 정책방향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기체계 구매력을 활용한 중·장기 방산국제협력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무기획득절차에 기초한 종합적인 중장기 방산국제협력목표의 수립이 없이는 국가별 방산공동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용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우리의 군사력 건설과 방산국제협력을 목표지향적으로 연계시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소요 무기/군사기술에 관한 해외시장조사기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과연에 국방과학기술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획득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대외교섭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 소요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에 관한 「중장기 무기체계 해외시장조사서(가칭)」를 획득개발 계획서의 부록으로 작성함으로써, 해외시장 조사기능을 국방기획문서체계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셋째, 기술획득 및 협상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일정 획득비용이내(예 : 직구매 비용이 130%), 시스템 조립위주의 내실없는 기술도입생산 방식을 지양해야 합니다.

국내업체 선정시에는 기존 투자시설,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의 자체 투자계획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업체의 하청생산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증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업체간의 협상은 정부/업체 합동 협상팀이 다수 외국업체와 동시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술도입생산/직구매시 주계약과 절충교역을 동시에 협상하고, 무기체계 획득 관련기관과 해당업체가 팀을 구성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넷째, 방산업체의 방산국제협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요청됩니다.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의존도가 낮고, 장래의 방산시장이 불투명하므로, 기업 경영전략수립 과정에서 방산부문은 주목을 받지 못하며, 업체차원의 국제협력의욕도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군의 군사력 건설방향, 무기체계요소, 연구개발과제, 획득개발계획, 중장기 방산 국제협력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방산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협의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장기 경영전략 및 국제협력계획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와 업계의 방산국제협력 공동추진 및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방부 및 업계(방진회)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와 업계의 공동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발생 우려를 조속히 떨쳐버리고, 방산국제협력 전략 수립시부터 정부와 업계의 결집화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교섭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장기보직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협력 대상국가별 군사부문 무역수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 대상국과의 군사거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군사부문 무역수지(Defense Trade Balance)를 작성, 유지함으로써 공동사업 추진시 절충교역 완화 압력을 배제시키고, 한국측의 기술이전 요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수지와 군사부문 무역수지가 모두 적자인 국가에 대하여,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군사력 건설소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역량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위산업 국제협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 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목표와 전략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향후 방위산업 국제협력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출보다는 무기체계의 구매력을 활용한 선진 군사기술의 획득에 두며, 기본적으로 20여년간의 방산지원/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정책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공을 기피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필요한 기술을 유럽선진국 및 러시아 등으로부터 도입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건설 소요와 방산능력을 고려한 우리의 필요사항(needs)을 정확히 식별하고, 이에 대한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후,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국가별 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방산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한 여건하에서, 정부의 계획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